


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 
경제관계장관회의 겸  
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 
25-8-3  
(공개)

 역동경제로  
서민·중산층 시대 구현!

---

#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

---

2025. 3. 5.

관 계 부 처 합 동

#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(요약)

## I 추진 배경

- 그간, 정부 주도의 방역정책 추진을 통해 가축전염병 관리체계가 안정화되고 피해·확산을 최소화하는 등의 소기의 성과 달성\*
  - \* 살처분 범위 축소(AI 3km → 500m, 렘피스킨 발생농장 → 양성 개체) 등
- 매개체 예찰·관리 강화, 위험농가 소독·점검, 선제적 백신 비축 및 신속한 접종 등의 방역관리를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살처분 최소화
  - \* '24년 구제역 미발생, AI 57% 감소(75건 → 32), 렘피스킨 78% 감소(107건 → 24)
- 다만, 현 정부 주도의 사후방역 체계는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예방·관리에 한계
  - 정부의존적 방역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방역 의식이 아직 부족
  - 축산규모화, 전파요인 다양화 등에 따라 살처분, 이동제한 등의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방역조치는 큰 사회적 비용 소요
- 아울러, 렘피스킨('23~)과 같은 새로운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, 인수공통전염병 확산('24년 미국 66명 AI 감염) 등 새로운 위험 요인 대비 필요

## II 추진 방향

비전

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축산 실현

목표

- ◆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('24) 829 → ('27p) 550 → ('29p) 440)
- ◆ 방역 우수 농장 500호까지 확대('24) 50호 → ('27p) 300호 → ('29p) 500호)

주요 전략 및 과제	① 자율방역 강화	② 사전예방 시스템 효율화
	■ 지역단위 방역관리 체계 강화, ■ 농가단위 방역 역량 제고, ■ 민간 방역 생태계 조성	■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, ■ 사람·차량 등 관리 강화, ■ 방역 점검의 실효성 제고
	③ 신종·소모성 질병 등 대응강화	④ 방역인프라 확충
	■ 신종전염병 사전 대비, ■ 인수공통전염병 협력체계 강화, ■ 소모성 질병 방역 관리 강화	■ 가축전염병 분류체계 개편, ■ 방역 인력 효율적 운용, ■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강화

### Ⅲ 세부 추진과제

#### [과제 1] 자율방역 강화

- **(지역단위 방역관리)** ‘지자체 계획수립-정부 이행관리·지원’의 방역체계 구축
  - (방역관리) 지자체 방역여건\*에 맞는 ‘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’ 수립(3년주기) 및 위험 시·군별 방역전략지도 마련(매년)
    - \* 지리적 환경, 축산농가 및 관계시설 현황, 야생동물 서식밀도, 주요 차량이동 노선 등
  - (평가·환류) 지자체의 방역관리계획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방역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(사업체계 개편, '26~)하고, 지자체 합동평가 등 활용 강화
- **(농가단위 방역)** 교육, 캠페인, 인센티브 등을 통한 농가 차단방역 강화
  - (교육) 방역미흡 농가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별도 교육체계 구축 및 농장 근로자\*까지 방역교육 대상 확대
    - \* ('25) 외국인 근로자 → ('26~)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내국인 근로자 → ('28~) 모든 근로자
  - (캠페인) 생산자단체 등과 협업하여 ‘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’(가칭) 등의 농장 참여형 자율방역 캠페인 활성화
  - (인센티브) 방역 시설·관리 수준을 지수화, 등급화하여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('25~)하고 우수농가에 정책사업, 방역조치 완화 등 인센티브 지원\*
    - \* (사업) 사료 자금, 시설 지원, 백신 지원 등 우선 선정  
(방역 조치 완화) 농장점검 및 예방적 살처분 제외,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 완화 등
- **(민간방역 생태계)** 소독·방제, 컨설팅, 질병진단, 사체처리 등 방역 전주기 민간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
  - (소독·방제)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활용도(닭 진드기 방제 → 타축종 등) 및 역량 제고를 위한 방제 매뉴얼 마련, 교육과정 개선(럼피스킨 추가) 등 추진
  - (컨설팅) 민간 컨설팅 효율화를 위한 방역 전문 컨설턴트 인증 제도 도입
  - (사후처리) 가축 살처분, 사체처리 등을 영위하는 가축폐기물 처리업종 신설

## [과제 2] 사전예방 시스템 효율화

- **(스마트 방역)**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위험 지역 중심 방역관리 스마트화
  - (위험도 평가)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(KAHIS) 내 방역정보를 활용하여 고위험 지역·농장을 선별하고, 소독, 점검, 예찰 등의 방역자원투입 효율화
    - 평가 가축전염병 확대\* 및 정확도 제고('24: 44% → '29: 85%)
      - \* ('24) AI 위험도 평가 시범 적용 → ('25)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→ ('26) 시스템 고도화
    - 위험도 평가 정보를 지자체·민간 등에 공유하여 자율방역관리에 활용
  - (시스템 개선) 질병 예측·분석 고도화, 대국민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한 차세대 KAHIS 시스템 전환 로드맵 마련('26)
- **(전파요인 관리)** 축산관계시설, 사람·차량 등에 대한 방역의무 강화
  - (시설) 축산관계시설(도축장, 사료제조업체, 원유장 등) 영업자 방역의무 강화
  - (차량) 운전자 방역기준 준수 의무('25~) 부여 및 방역교육 주기 단축(4년 → 2년)
  - (출입자) 살처분, 가축사체처리업자 방역준수 의무(등록제 신설) 부여
- **(농장점검)** 농림축산검역본부(농식품부 소속) 특사경 전담부서 설치,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(기타 공공) 특별점검반 배치 등 점검 전문인력 확충
  - 점검 거부 농가 패널티 부여, 점검 시 모바일 활용 확대 등 점검 효율화

## [과제 3] 신종 및 소모성 질병 등 대응 강화

- **(신종전염병)** 인접국가에서 발생 중인 가성우역, 아프리카마역 사전 대비
  - (예찰) 가성우역(아생고라니 등), 아프리카마역(파리·모기 등)의 매개체 예찰 추진
  - (대응) 가성우역 및 아프리카마역 백신 비축\*, 긴급행동지침(SOP) 마련
    - \* (가성우역) 16만두분(전체 염소의 30%), (아프리카마역) 28천두(전국 말 1회 접종분)

- **(인수공통전염병)** 가축-사람간 전파 차단을 위한 농장 예찰 및 농업인 교육 강화
  - (예찰) 포유류 AI(3,646건→5,962), 큐열(15,700건 신규), SFTS(980건→1,300) 등의 예찰을 확대하고, 중장기 인수공통전염병 예찰 프로그램 개발('25) 추진
  - (교육) 인체감염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선 및 농업인 교육 강화
    - \* 농진청 교육 활용을 위한 표준 교안, 감염예방수칙 영상 등 제작
- **(소모성 질병)**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맞춤형 방역대책 추진
  - (모니터링) 3종 가축전염병 방역조치 완화로 농가의 발생신고 유도 및 돼지유행성설사(PED) 등 정기 예찰 추진('25~, 500호)
    - \* 발생 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→ 방역조치 미실시하여 자율적인 신고 및 방역조치 유도
  - (컨설팅) 전담기관(방역본부) 지정, 컨설턴트 평가체계 구축, 우수사례집 배포 등
  - (백신) 맞춤형 백신 지원 및 백신관련 지도·교육 강화(생산자 단체 협업)

#### [과제 4] 방역인프라 확충

- **(분류체계 개편)** 치명률,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1종, 2종, 3종 가축전염병의 분류체계를 명확화\*하고, 방역조치 개편('25~)
  - \* 1종, 2종, 3종의 정의 신설 → 정의에 맞게 가축전염병 재분류 및 신규추가 등
  - 1종은 전국·지역 단위(일시이동중지, 예방적살처분), 2종은 농장단위(살처분, 이동제한) 방역조치를 실시하고, 3종은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
- **(인력운용)** 방역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가축방역관 업무조정 및 인력 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('25)하고 민간 가축방역 인력\* 활용 확대
  - \* 공수의 위촉 주체 확대(시·군·구 → 시·도), 민간인력의 가축방역사 위촉확대 등
  - 여건변화 등을 반영\*하여 지자체 가축방역관 적정인원 기준 재설정('26)
    - \* 가축방역사 확대, 개식용 종식, 가축전염병 분류체계 및 방역조치 개편 등
- **(R&D)** 과제발굴, 연구방향 설정 등을 위한 가축방역 연구협의체를 구성·가동하고, 백신, 차단방역 등 현장 중심 연구개발(R&D) 강화

# 순 서

I. 추진 배경 .....	1
II.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.....	2
III. 성과 및 반성 .....	4
IV. 여건변화 및 시사점 .....	8
V. 추진방향 .....	10
VI. 세부추진과제 .....	12
1. 자율방역 강화 .....	12
2. 사전예방 시스템 효율화 .....	17
3. 신종 가축전염병·소모성 질병 등 대응강화 ·	21
4. 방역 인프라 확충 .....	24

## I. 추진 배경

### □ 매년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사회·경제적 피해 발생

- 구제역(FMD),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 폐사, 방역 조치(살처분·이동제한 등)로 인한 대규모 재정 지출 불가피
  - \* '10/'11년 구제역 2조 7,383억원, '16/'17년 AI 3,621억원 소요 등
-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(PRRS) 등 소모성 질병은 축산생산성 저하의 주요 요인
  - \* 양돈수의사 40명 중 32명(80%)이 지역 내 PRRS 순환감염이 있다고 추정(돼지수의사회, '24.1)
- 또한, 축산물 수급 불안에 따른 가격상승\*, 가축 살처분 시 환경 오염우려, 축산농가 모임 제한(지역행사 취소) 등 일반국민의 피해 유발
  - \* 계란 소비자 가격(30구) '16/'17년 9,096원, '20/'21년 7,611원까지 상승(평년 6,047원)

### □ 현 정부 주도의 사후방역 체계는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예방·관리에 한계

- 그간, 정부의 재정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가축전염병 관리체계 안정화 및 피해·확산 최소화 등 소기의 성과 달성\*
  - \* 살처분 범위 축소(AI 3km → 500m, 렘피스킨 발생농장 → 양성 개체) 등
- 그러나, 민간의 자율적인 방역 의식이 아직 부족하고, 사전 예방을 위한 농장-사람·차량-축산관계시설 등의 관리체계 일부 미흡
  - 렘피스킨('23~)과 같은 새로운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 위험 증가, 포유류 AI 등 인수공통전염병 확산 등 가축전염병도 다양화 추세
- 가축방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'가축전염병 예방 - 확산 차단 - 사후 관리' 등 방역 정책 전반에 걸친 획기적인 변화 필요

= 민간 자율방역체계 강화, 사전 예방 중심의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방역 대책 마련 추진 =

## Ⅱ.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

### □ (사전예방) 가축전염병 농장유입 차단을 위해 농장·매개체·차량 등 관리

- (농장) 방역 수칙 등 의무부여, 방역 교육 및 점검(연 1회 이상) 등 추진
  - 과거 발생 현황 등을 바탕으로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집중관리
  - 농가의 백신 구입비를 지원하고 일부 전염병은 백신접종 의무화(명령)
- (매개체) 철새 예찰 및 도래지 관리, 야생멧돼지 수색·포획 등 실시
  - 매개체에서 바이러스 검출 시 인근 지역 소독·출입제한 등 방역 조치
- (차량) 축산차량 모니터링(GPS 장착) 및 소유자·운전자 교육(1회/4년)
- (검역) 축산관계자 위험국가 방문 신고 및 입국 시 소독·방역교육, 축산농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(2,719호 9,776명(21개국)) 등

### □ (평시 관리) 농장 간 확산 차단 등을 위한 조기 발견 체계 구축

- (신고) 가축의 소유자, 수의사 등에 가축전염병 의심축 신고 의무 부여
  - \* 신고 지연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신고 의무가 없는 자가 가축전염병 신고 시 포상금 지급
- (예찰·검사) 질병 특성 등을 고려한 농장 정기 검사 및 전화예찰 등 추진
  - \* (AI) 겨울철 출하전 최대 4회 (구제역) 50두 이상 소 농장 연 1회 양돈농장 연 2회 항체검사 등

### □ (발생대응) 초동방역 등으로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 회복 지원

- (초동방역) 발생농장 및 인근지역 이동제한, 살처분, 소독 등
- (확산방지) 위험농장 대상 검사·예찰, 가축집합시설 사용정지 등
- (피해회복) 발생농장 등에 살처분 보상금, 생계안정자금 등 지원, 가축매몰지 관리, 살처분 참여 인력 심리치료 지원 등

## 주요 방역정책의 변화

- ◆ 축산업 허가제, KAHIS 등 방역기반을 구축하고, 예방적 살처분 범위 최소화
- ◆ 농장 시설기준 등 의무를 강화하면서 민간 협업 체계 구축

### ▶ 축산업 허가제

- '12년 축산업 허가제 도입 및 소독시설·방역시설 설치 의무화
- '14년 축산업 허가자 교육 강화(1회/2년 → 1회/1년), 가금류 농장 500m 내 신규 가금 사육업 허가·등록 제한, 방역미흡 농가 축산업 영업정지 및 허가 취소 규정 신설

### ▶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(KAHIS, '13~)

- '19년 축산차량 관제센터 운영
- '23년 위험도 평가 모델을 개선하여 빅데이터 기반 위험도 평가·예측 모델 구축

### ▶ 예방적 살처분 범위

- (AI) 3km 이내 살처분('18~) → 500m 이내 살처분 + 위험도평가에 따라 살처분 범위 조정('21/'22~) → 500m 이내 방역 우수농장 예방살처분 제외 가능('24/'25)
- (구제역) 500m 내외(필요시 확대) + 동일소유주 농장 등 역학관련농장('10) → 발생농장 양성개체('12) → 최초 발생농장 전두수 + 동일 시군내 추가 발생농장 양성개체('16)

### ▶ 농장 방역시설 기준 및 준수사항

- '15년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방역기준 준수 의무 부여,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신설
- '18년 가금농장 CCTV 설치 및 영상 1개월 보관 의무, 전실 등 방역시설 기준 강화
- '19년 가금농장의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, 5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에 대한 소독방제 의무 강화
- '20년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신설 및 지구 내 양돈농가 8대방역시설 의무화
- '21년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마련
- '22년 양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 의무화

### ▶ 구제역·럼피스킨 백신접종

- '12년 전업규모 이상 소·돼지 농가 백신 비용 분담(0 → 50%)
- '17년 소·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정례화, 구제역 백신 제조시설 구축 추진
- '22년 럼피스킨 선제적 백신 비축(54만두)
- '23년 소 염소 자가접종 농가 항체검사 강화(5두 → 16두), 럼피스킨 전국 백신접종

### ▶ 기타

- '12년 일시이동중지(Standstill) 제도 도입, 축산차량 등록제 도입
- '15년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 대상 방역교육 및 점검 의무 부여
- '17년 지자체장에게 사육제한 명령 권한 부여
- '18년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, 대규모 사육농가에 '방역관리 책임자' 제도 도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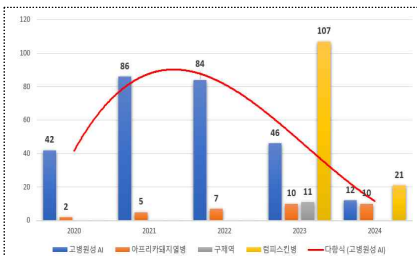
### Ⅲ. 성과와 반성

#### 성 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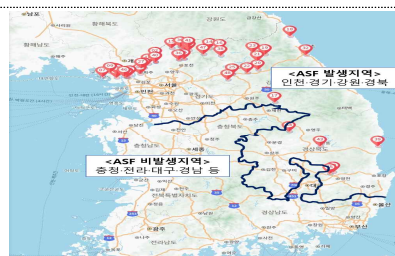
- ❖ 주요 매개체 예찰·관리 강화, 위험농가 소독·점검, 선제적 백신 비축 및 신속한 접종 등의 **방역 관리**를 통해 **축산농가 피해 및 물가 영향 최소화**
  - 살처분 보상금, 생계안정자금 등 지원, 매몰지 관리 등을 통해 2차 피해 예방
- ❖ 가축방역의 정보화 기반 구축(KAHIS, '13~), 주요 전염병 진단 기간 단축(럼피스킨 7일 → 1일), 민간 검사 확대 등 방역관리 효율화 **인프라 확충**

#### ① 전염병별 맞춤형 방역관리로 가축전염병 발생 건수 및 살처분 최소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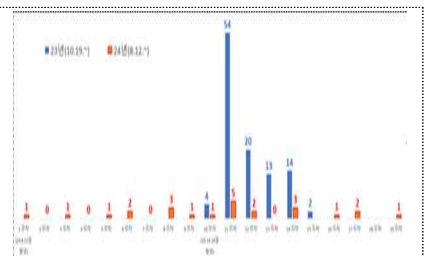
- (AI) 바이러스 전파(철새→농장) 차단, 산란계 농장 특별관리, 위험도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조정 등으로 **농가 경영 안정 및 수급 영향 최소화**
  - \* 발생건수 / 살처분: ('20/'21) 109건, 2,993만마리 → ('21/'22) 47건, 731만마리 → ('22/'23) 75건, 661만마리 → ('23/'24) 32건, 367만마리 → ('24/'25) 35건, 363만마리
- (ASF) 농장의 방역시설 수준 제고(전실 등 8대 방역시설 의무화), 위험농장 점검, 야생멧돼지 관리 등으로 **전국 확산 차단**(경기·강원·경북만 발생)
  - \* '19년 이후 야생멧돼지에서 약 4,200건('20년 856, → '22년 878 → '24년 719), 양돈농장 51건 발생
- (럼피스킨) '23년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의 백신을 신속히 도입(54만두 사전비축, 400만두 추가 도입)하여 **발생 후 조기 안정화**(10.19~11.20, 107건)
  - '24년 고위험지역 중심의 선제적인 백신접종 등을 통해 **확산 차단**
  - \* ('23년) 107건, 6,455두 살처분 → ('24년) 24건, 318두 살처분



<연도별 가축전염병 발생동향>



<ASF 발생지역>



<'23-'24년 럼피스킨 주간 동향>

- (구제역) 철저한 백신접종 관리로 '24년 미발생('23년 11건) 및 제주도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 기반 마련('24년 신청 → '25년 인증 예상)

---

## ② KAHIS 등 인프라를 강화하여 방역체계 효율화·고도화 기반 마련

---

- (KAHIS<sup>\*</sup>) 농장 방역 정보 축적, 축산차량 이동 모니터링 등 가축 방역의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확산 차단에 기여
  - \* (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) 가축방역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해 '13.1월부터 본격 운영
- (연구개발) 럽피스킨(7일→1일), 구제역(8~24시간→1.7시간) 등 가축전염병 진단 기간 단축, 저병원성 AI(H9N2형) 백신 개발 등 방역 기반 강화
- (민관협업) 질병별 검사량 증가에 대응한 민관협업 검사 체계 구축('23년 AI 1,452건, 구제역 1만건) 및 민간전문업체(세스코 등)를 활용한 매개곤충 방제

---

## ③ 피해농장의 경영 불안정을 최소화하고, 2차 피해를 예방

---

- (피해농장 지원) 제도개선<sup>\*</sup> 등을 통해 살처분 보상금, 생계·소득 안정자금 등을 신속 지원하여 피해농장 경영 안정에 기여<sup>\*\*</sup>
  - \* (생계·소득) 축발기금에서 농특회계로 이관하여 기금 여건에 따른 예산집행 지연 등 방지
  - \*\* ('21) 2,021억원(살처분 보상금 1,953, 생계·소득 68) → ('22) 808(744, 64) → ('23) 1,292(1,201, 91)
- (매몰지 관리) 가축 매몰지 점검·관리 등을 통해 침출수 유출 등 예방<sup>\*</sup>
  - \* '20년 이후 매몰지 관리 소홀로 인한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 사례 無

---

## ④ 효율적인 농장 차단방역을 위해 방역기준 강화 및 규제 현실화

---

- (시설기준) 양돈농장 방역시설 기준 강화<sup>\*</sup>('22),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의무('23) 신설 등
  - \* 전실, 방역실, 울타리, 폐기물관리시설 등 8대 방역시설('20년 중점방역관리지구 → '22년 전국)
- (방역 수칙) 가금 농장 1회용 난좌 사용 의무화('23) 등
- (제도개선) 방역 우수농가의 인센티브를(살처분 보상금 혜택) 강화하고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하여 건폐율 미적용<sup>\*</sup>('23)
  - \*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'15년 4월 이전 설치된 시설만 적용

## 반 성

- ❖ 정부주도의 방역추진으로 농가의 방역 책임의식이 아직 부족하고, 농가 자율방역 및 민관 협업 강조 등 해외 정책기조 변화추세에 대응 미흡
- ❖ 그간 AI 등 1종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살처분, 역학농장 관리 등 방역체계는 고도화되었으나, 사전예방 시스템 정착 및 소모성 질병 대응 등에 소홀
- ❖ 현장 차단방역을 지원할 연구개발 강화(R&D), 방역 전문인력 확충 등 필요

### ① 정부 주도 방역 지속으로 지역단위 자율방역 체계 미흡

○ (지역방역) 중앙 주도의 방역대책 수립으로 지역 방역관리를 책임지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여건별 맞춤형 방역관리 미흡

- 지역 가금산업을 주도하는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관리역할 소홀
- 일부 농가의 차단방역 미흡\*으로 인해 주변 농가 및 지역 사회에



외부울타리 훼손

신발소독조 관리 미흡

악영향(일시이동중지, 출하제한, 축산농가 모임금지 등)을 미치는 악순환 지속

\* 차량출입자 소독 미흡 등 기본 방역수칙 위반, 구제역·럼피스킨 등 백신접종 명령 위반

○ (방역산업) 소독·방제, 컨설팅, 방역시설·장비 등 지역단위에서 현장의 방역을 주도할 민간 방역산업은 초기 단계 수준

○ (농가 방역관리) 방역시설 기준은 높아졌으나, 농가 방역인식은 제자리

- 방역수칙 위반농가 등의 교육체계 부재, 방역 인센티브 미흡 등

### ②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와의 통합적 접근·연계가 미흡

○ (KAHIS 활용) 발생 이후 역학 농장 선별 등\* 확산 차단에 치중, 고위험 농가 선정·관리\*\* 등 사전 예방 기능 강화 및 사후조치와의 연계 필요

\* 방역 조치 준수 여부 감시(축산차량 GPS관제 등) 및 지자체 통보체계 등 기구축

\*\* 농장 위치, 과거 발생 여부 등으로만 위험 농가(중점방역지구) 선정·관리

- (사람·차량 관리)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축산관계시설 영업자, 차량운전자, 살처분 인력 등에 대한 일부 관리 사각지대 존재
  - \* 축산관계시설 영업자 및 축산차량 운전자 등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재 등
- (점검) 축산농가가 많아 면밀한 점검이 현실적으로 어렵고, 지자체는 온정주의 등에 따라 주로 현장 지도에 그침
  - \* '23/'24년 가금농장 점검(확인서) : 검역본부 62건/2천호(3.1%), 지자체 4건/15천호(0.03%)

### ③ AI 등 주요 가축전염병에 방역역량을 집중하여 타 전염병 대응 소홀

- (신종 가축전염병) 일부 신규 유입 우려 전염병(가성우역, 아프리카마역 등)에 대한 예찰, 긴급행동지침(SOP), 백신 비축 등 대비·대응체계 미흡
- (소모성질병) 3종 가축전염병은 농가에서 발생 신고를 기피\*하고 별도의 예찰 체계 부재로 발생 현황 파악 및 방역대책 수립에 난항
  - \* 이동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농가 및 수의사가 미신고 경향

### ④ 인적·제도적 기반강화를 통한 방역관리 체계화 및 현장 맞춤형 기획 연구 등 필요

- (가축전염병 분류) 최근 가축전염병 발생 양상 등이 다양화되고 있으나, 기준이 불명확한 1~3종 전염병 분류체계 및 방역조치 지속 유지
  - \* (미국·일본) 정부가 직접 방역관리하는 주요 질병과 농가 자율방역을 전제로 한 신고 질병(모니터링) 체계로 방역 대응 중
- (방역인력) 수의 인력\*들의 공직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다소 부족하고, 민간 방역인력(가축방역사, 공수의 등)의 활용도 제한적
  - \* (지자체 수의직 공무원) 현원 785명으로 정원 1,063명 대비 278명 부족(24.9. 기준)  
(공방수) '22년 150명 → 23년 127명 → '24년 103명 → '25년 102명
- (방역 R&D) 진단·치료 분야 연구에 치중\*되어 차단방역 관련 연구 성과가 미진하고 주요 가축전염병 백신\*\* 원천기술 확보 필요
  - \* 최근 3년 투자: 진단·예찰 429억원(49%), 백신·치료제 417억원(47%), 차단방역 35억원(4%)
  - \*\* 매년 약 450억원(구제역 320, 렘피스킨병 130)의 백신을 수입하여 접종

## IV. 여건변화 및 시사점

### ① 정부 의존적 방역으로 민간의 방역수준 정체 → 민간주도 자율방역 강화 필요

- 축산업 규모화, 전파 요인 다변화 등으로 정부 주도 방역의 비효율이 증가하고, 현장 여건에 맞는 민간 중심의 차단방역 중요성 증대
- 해외는 민간 자율방역 정책\*으로 전환 중, 국내도 방역 수요 증가로 동물약품, 소독·방제업, 민간 컨설팅 등 가축방역 관련 산업 성장 추세\*\*
  - \* (세계동물보건기구(WOAH)) PPP(Public-Private-Partnership) 가이드라인 배포 (영국) 종계업체가 정부 인정 자체 방역관리 프로그램 운영 시, AI 방역대에서 제외 등
  - \*\* (동물용의약품) '18~'23년 연평균 3% 성장, (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) '20년 62개소 → '24년 310

### ②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사회적 비용 高 →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 효율화 필요

- 광범위한 살처분,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는 동물복지 문제, 물가 상승, 인력·재정 소요 등에 따라 위험 요소의 사전 관리 필요
- 사물인터넷(IoT), 빅데이터, 인공지능(AI) 등 기술 확산에 따른 사전 방역 역량 제고(KAHIS 기능 확대 등) 및 차단방역 기술 수요 증대 전망

### ③ 가축전염병 다양화, 인수공통전염병 확산 등 → 새로운 위험 요인 대비 필요

- 기후변화 등으로 5월 AI 발생 등 발생 양상이 다변화되고 해외 교류 증가에 따라 국가 간 전파가 빠르게 진행\*
  - \* (ASF) 아프리카→유럽(12) → 중국(18) → 한국(19), (LSD) 아프리카→튀르키예(13) → 중국(19) → 한국(23)
  - 소모성 질병\*은 농장 내 순환 및 지속 변이로 피해 확대 우려
    - \* 피해규모: PED 1,834억원(한돈협회), PRRS 2,700억원(돼지와 사람, '24.8.15) 추정
- 특히, 포유류 AI\* 확산에 따른 새로운 팬데믹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인수공통전염병의 동물단계 관리 강화 필요성 증가
  - \* '24년 미국 젓소농장 AI 917건 발생, 66명 인체 감염

## 질병별 해외 방역정책 동향

- ▶ **(고병원성 AI) 젖소·돼지 발생 및 인체감염 등 양상 복잡화, 일부 국가는 백신접종 중**
  - \* 미국, 일본, 한국 등은 고병원성 AI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않고, 유사시를 대비하여 항원뱅크 운영
  - **(미국)** 젖소농장에서의 확산\*으로 주(州) 간 가축(착유우) 이동 시 검사 의무화, 양성축 격리, 우유 살균(열처리) 등의 조치와 인체감염\*\* 예방조치 권고
    - \* '24년 16개 주 917건의 젖소농장 발생, 돼지농장에서도 H5N1 검출
    - \*\* '24년 총 66명 확인 / 보호장비 착용 및 노출 시 10일간 임상증상 관찰 등 조치
  - **(중국·동남아)** 일부 가금농장에 백신접종을 실시 중이나 근절되지 않음
  - **(유럽)** 프랑스는 오리에 한해 백신을 접종 중이나 지속 발생하는 양상
- ▶ **(아프리카돼지열병) EU는 야생멧돼지 관리 중심 정책 추진. 베트남은 ASF 백신 도입('23.8월~)**
  - **(벨기에)** 울타리 설치 후 집중 수색·포획으로 멧돼지 완전 도태, 청정지위 회복('20.12월)
  - **(베트남)** 미국 개발 생백신주 자체 상업화(2종), 다만, 병원성 잔류 등에 따라 제한적 사용 중
- ▶ **(구제역) 미국, 일본, EU(영국 포함) 등을 살처분 중심의 정책 추진 중 → 확산 시 긴급백신 접종체계 구축** \* 해당국가 모두 백신 미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
  - **(미국)** ①발생농장 살처분(의심농장 포함), ②발생농장 + 인근 예방접종 가축 살처분, ③살처분 + 특정동물 긴급예방접종, ④살처분 없는 긴급예방접종 4가지\* 기본 전략 추진 중
    - \* 살처분 가축은 일반적으로 50% 보상, 그러나 농무부장관이 비상사태 선언 등 경우 100% 보상 가능
  - **(일본·EU·영국)** 발생 시 살처분\*을 기본 정책으로 시행 중이며, 확산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긴급백신 접종 가능
    - \* (일본) 감염축은 시세의 1/3, 의심축은 시세의 4/5 보상, (EU) 100% 보상(EU 60%, 회원국 40%), (영국) 시가의 100% 보상
- ▶ **(럼피스킨) 일본은 살처분 미실시, 백신접종, 매개곤충 방제 등만 추진**
  - **(일본)** LSD 감염축은 신고대상 질병으로 살처분 대상이 아니며, 이동제한만 조치
    - \* '24년 럼피스킨 발생(24건)에 따라 긴급 백신접종 중(지역에 따라 백신접종 비용 농가 부담 상이)
  - **(EU)** Category A 질병(EU 동물건강법)으로 살처분<sup>필요시</sup>, 고위험 지역 백신접종, 이동 제한, 매개곤충 방제 등 조치 중

## V. 추진 방향

비전

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축산 실현

목표

◆ **법정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최소화**

\* 발생건수: ('23) 1,114건 → ('24) 829 → ('25p) 725 → ('27p) 550 → ('29p) 440

◆ **2029년 방역 우수 농장(1등급)을 500호까지 확대**

\* ('24) 산란계 50호 → ('25) 80호 → ('27) 300호 → ('29) 500호

◆ **위험도 평가 확대 및 정확도 제고**

\* 대상: ('24) AI → ('25) ASF / 정확도: ('24) 44% → ('27) 70 → ('29) 85

추진 전략

◆ **정부 주도 방역에서 지역-민간 주도 방역으로 전환**

◆ **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위험도 기반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**

◆ **가축전염병 다양화에 대응한 관계부처 및 국제협력 강화**

주요 과제

1. 자율방역 강화

- ① 지역단위 방역관리 체계 강화
- ② 농가 단위 방역 역량 제고
- ③ 민간주도의 방역 생태계 조성

2. 사전예방 시스템 효율화

- ①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(KAHIS) 기반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
- ② 사람·차량 등 주요 전파요인 관리 강화
- ③ 방역 점검의 실효성 제고

3. 신종전염병·소모성질병 등 대응강화

- ① 신종 가축전염병 사전 대비
- ② 인수공통전염병 대비 원헬스(One-Health) 협력체계 강화
- ③ 소모성 질병 방역 관리 강화

4. 방역인프라 확충

- ① 가축전염병 분류체계 및 방역조치 개편
- ② 현장 가축방역 인력의 효율적 운용
- ③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강화

## 주요 개선사항

분야	현행	개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자율방역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정부 주도의 방역관리</li> <li>▶ 농장주 대상 관행적인 방역교육 등으로 방역인식 저조</li> <li>· 방역 우수농장 인센티브 미흡</li> <li>▶ 민간방역 산업화 미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지자체 중심의 지역방역 관리체계 수립*하고, 정부는 평가·환류</li> <li><small>* 밀집단지 관리, 위험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관리, 중점방역관리지구 방역, 위험지역 소독 등</small></li> <li>▶ 교육 개선*, 자율방역 캠페인, 위반농가 패널티 강화 등 농가 방역인식 제고</li> <li><small>* (교육대상) 농장주 → 근로자 추가, (교육횟수) 연 1회 → 방역수칙 위반농가 추가 교육 등</small></li> <li>· 우수농장에 대한 사업우선지원, 방역 조치 완화 등으로 방역수준 상향 유도</li> <li>▶ 방역위생관리업 활성화, 가축폐기물 처리업 신설 방역 컨설턴트 인증 등 추진</li> </ul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사전에방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과거의 발생통계를 활용한 위험 농가 선별 및 관리</li> <li>▶ 사람, 차량 등 농장 간 전파 요인 관리체계 공백</li> <li>▶ 지자체의 농장 점검·관리 미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빅데이터 활용한 위험농가·지역 중심 방역관리 효율화</li> <li>· 위험도 평가 고도화 및 활용확대</li> <li>▶ 축산관계시설, 축산차량 운전자 등의 방역의무 강화</li> <li>▶ 점검전문인력 확충, 점검거부농가 관리 및 CCTV 활용 등 점검 효율화</li> </ul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신종·소모성 질병 등 대응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아프리카마역, 가성우역, 포유류 AI 등 신종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미비</li> <li>▶ 인수공통전염병 동물단계 관리 미흡</li> <li>▶ 소모성 질병 현황 파악 난항 및 방역대책 미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백신비축, SOP 제정, 모의훈련 등 신종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구축</li> <li>▶ 동물단계 예찰확대, 백신개발 등 추진</li> <li>·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질병청 등 협력강화</li> <li>▶ 방역조치를 개선하여, 농가 신고 유도</li> <li>· 컨설팅 효율화 맞춤형 백신 지원 등 병행</li> </ul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방역인프라 확충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가축전염병 분류 근거 불명확</li> <li>▶ 수의직 공무원 부족 및 민간 인력의 제한적 활용</li> <li>▶ 가축방역 연구기관 간 협업 미흡 및 단기개별과제 중심의 연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치명률, 전파력 등 분류 근거 마련 및 종별 방역조치 체계화</li> <li>▶ 가축방역관 업무조정, 공수의가축 방역사 위촉활용 확대 등 추진</li> <li>▶ 가축방역 연구개발 협의체 운영 및 주요 백신 연구 개발 강화</li> <li>· 차단방역 등 현장맞춤형 R&amp;D 추진</li> </ul>

## VI. 세부 추진 과제

### [과제 1] 자율방역 강화

- ❖ 지자체 주도로 지역 여건에 맞는 방역대책 수립·운영 및 지자체 평가·환류체계 구축
- ❖ 소독방제, 농가 컨설팅, 질병 진단, 사체처리 등 방역 전주기 민간 산업 생태계 조성
- ❖ 교육-캠페인-우수농장 인센티브 연계 등을 통해 농가 방역역량 제고

#### 1 지역단위 방역관리 체계 강화

- (방역관리)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해 지역단위 방역 여건\*에 맞는 방역 전략 수립 추진
  - \* 지리적 환경, 축산농가 및 관계시설 현황, 야생동물 서식밀도, 주요 차량이동 노선 등
  - 지자체가 방역 여건에 맞는 자체 '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\*'을 3년마다 수립하고, 정부는 계획 이행을 관리·지원하는 정부-지자체 방역 체계 구축(26)
    - \* 시도 및 시군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3년마다 수립·시행 의무(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) / 예방 및 조기발견·신고체계 구축, 긴급방역대책 수립·시행, 방역 교육·홍보, 전문인력 육성 등
  - AI, 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별 위험도가 높은 시·군은 여건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방역전략계획 수립
    - \* 과거발생 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분포, 축산차량·소독차량의 이동 도로 및 동선 취약요인 등 분석
    - 소독 자원 분배\* 계획뿐만 아니라, 위험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관리, 밀집단지 방역\*\*, 발생 시 대응계획 등 포함
      - \* 철새도래지 및 야생조류 항원 검출지점 주변 도로, 농가 진입로, 축산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등에 대한 소독계획(지자체, 농협 임차지원·공동방제단 등 차량활용)
      - \*\* 산란계 또는 양돈 밀집단지별 농가분포, 차량이동 동선, 공동시설(분뇨처리시설 등) 위치 등에 따른 맞춤형 방역관리 강화
    - 관내 중점방역관리지구가 있는 시·군은 지구 내 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(연 1회), 방역시설 점검 등의 지구 관리계획 수립

- 시·도가 지역의 가금 산업을 주도하는 계열사\*의 방역관리계획(2년주기)을 승인하고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하는 계열사 관리체계 구축('25, 가전법 개정)
  - \* ('23년 기준 계열화율) 육계 72개 사업자 90.1%, 육용오리 16개 사업자 94.5%
  - 계열사에 계약 사육 농가 방역점검 및 개선조치 등의 의무 부여
- **(현장대응 역량 제고)** 지자체의 신속한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 방역전문가 양성, 재난 대응 조직구성 등 지원
  - 방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시설\*(동물보건교육실습센터) 건립\*\* (~'28) 및 시·도 역학조사관 등 교육 강화
    - \* (미국) 국립수의연구소(NVSL)를 통해 역학전문가 등 다양한 동물보건 전문가 교육양성 중
    - \*\* ('25~'26) 시설 설계 → ('27~'28) 시설 공사 / 총사업비 180억원
  -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 등을 위한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(지대본) 실무반 표준 모델 제시(행안부 협조)
    - \* 방역부서 이외, 농업기술센터, 보건소, 농정과, 자치행정과 등 타부서의 역할분담 체계 명확화
  - 농식품부·지자체 합동 재난대응 가상방역훈련 실시(매년)
- **(평가·환류)** 지자체의 방역관리 실적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의 방역 책임 강화
  - 농식품부가 지자체의 방역대책 등을 평가하고 우수지자체에 방역 관련 사업 우선 지원 추진(사업체계 개편, '26~) 및 긴급방역비 지원 차등화
    - 미흡 지자체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, 사체처리 및 매몰비용 국비 지원비율 조정 등의 패널티 부과 검토(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필요)
  -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및 합동평가 등 지자체 평가지표(행안부 등 협조)를 다양화\*하여 방역실적 평가 내실화 및 단체장 중심의 방역 대응 유도
    - \* (현행) 재난관리평가 현장점검반 활동 실적, 합동평가 닭·오리 가축전염병 발생관리,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→ (개선) 방역예산·인력 확보현황, 예찰·점검 실적, 농가교육 실적 등

## 2 농가 단위 방역 역량 제고

- **(교육)** 차단방역 수준 제고 등을 위한 농가 교육 콘텐츠 다양화 및 방역 미흡 농가, 농장 근로자 등에 대한 별도 교육체계 구축
  - 럽피스킨, 포유류 AI 등 ①**신종·인수공통전염병**(인체감염 포함) 예방, ②**농장 책임의식 제고\*** 등 **가축방역 교육 커리큘럼 마련**
    - \* 가축전염병 신고 지연 시 발생농장 살처분 보상금 감액, 인근농장 확산 사례 등
  - **방역 수칙 위반 및 미흡 농가\***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**추가 방역 교육 의무 부여**(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, '25)
    - \* 구제역 항체 양성률 저조농가, 방역수칙관련 과태료 처분 농가 및 차량운전자 등
    - 방역본부를 **전문 교육기관**으로 지정, **전문인력 양성\*** 등 추진
      - \* 현장경력 5년이상 방역사, 수의사면허 소지자 등 20여 명을 전문 강사로 선발
  - **방역 교육 이수 의무를 농장주(축산업 허가자)에서 근로자까지 확대\***
    - \* ('25) 외국인 근로자 → ('26~)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내국인 근로자 → ('28~) 모든 근로자
    - 근로자 전용 교육 플랫폼 구축\*('25) 및 **맞춤형 콘텐츠 제공**
      - \* (주요내용) 가상농장을 활용한 현장감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, 교육완료 시 수수료증 제공 (적용) 세종, 강원, 경북 등 일부지역 시범운영('25~) 후 지역 확대 추진
- **(캠페인)** 생산자단체 등과 협업하여 자율적인 차단방역 활동 문화 조성
  - 정부-생산자단체 등이 협업하여 '**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**'(가칭)와 같은 **농장 참여형 자율방역 캠페인 활성화**
    - 분기별 기획기사, 유튜브, 보도자료 등 **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 추진**
      - \* '24년 '**장화 갈아신기 챌린지**' 실시 - 축산 농가가 장화 갈아신는 사진을 SNS 등에 게시



□ **(자가예찰) 자가진단 알림톡 활성화** 등을 통해 농가의 조기신고 유도

- 방역 관련 정보\* 등을 제공하여 농가의 알림톡 참여를 유도(계속)하고 농가가 질문, 사진전송 등이 가능한 양방향 소통시스템 구축('27)

\*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, 야생멧돼지·조류 동향, 일시이동중지 명령, 축산방역 정책, 입법예고 등

- 농가의 신고지연 방지를 위해 각 가축전염병별 명확한 신고 기준을 마련하고, 조기신고 농가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확대(10% → 15, '26~)

\* (예시: SI방역실시요령) 최근 7일 평균보다 폐사율 2배 이상 증가 또는 산란율 3% 이상 저하 등

□ **(경각심 제고) 방역 수칙 위반자 패널티를 강화하여 방역수칙 준수 유도**

- 일시이동중지 명령 등을 위반하여 전염병을 확산시킨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도 도입('25)

- 백신 미접종 등 방역수칙위반 농장 살처분보상금 감액 확대('26)

□ **(우수농장·마을 지원) 방역 관리 수준 등을 지수·등급화\***한 농장 평가시스템을 구축\*\*하고 우수농장·마을 인센티브 제공('25~, 질병 관리수준 등급부여 제도)

\* (예시) 외부울타리 높이 1.5m 1점, 1.8m 2점 / U자형 소독기 3점, 터널식 소독기 5점 등

\*\* 단계별 확대계획: ('25) 기존 산란계 유형부여 농장 시범적용 → ('26) 대규모 양돈 농장 추가 → ('27) 10만수 이상 가금농장, 종돈장 추가 → ('28) 가금·돼지·소 농장

- 희망농가·마을 대상 방역수준을 평가하고, 우수농장·마을(1~2등급)에게 정책 사업 우선 지원, 방역조치 완화 등을 통해 자율적인 방역 수준 상향 유도

\* (사업) 사료 자금, 시설 지원, 백신 지원 우선 선정 등

(방역 조치 완화) 농장점검 및 예방적 살처분 제외,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 완화 등

- 방역 우수농가·마을\*에 대해 소독제, 백신 등 질병관리 비용 지원\*\* 등의 인센티브 추가발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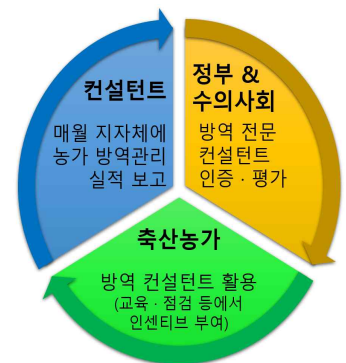
\* 정부는 적정 계획 수립 여부 평가 및 방역수칙 준수 점검 등 병행

\*\* 가전법 제18조에 따라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 수준이 우수한 농가 또는 마을에 소독 등 가축질병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지원 가능

### 3 민간주도의 방역 생태계 조성

- **(소독·방제)** 가축방역위생관리업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업대상 확대, 긴급행동지침(SOP) 개정, 교육과정 개선 등 산업육성방안 마련
  -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활용한 **닭 진드기 방제 사업 확대**(산란계 → 종계 추가) 및 닭 진드기 방제 이외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긴급행동지침 개정\*('26)
    - \*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 살처분·매몰 완료 후 청소·소독 시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활용 가능하도록 SOP 개정(긴급행동지침-발생농장 등의 청소·세척 및 소독요령)
  - 방역위생관리업자 역량제고를 위해 AI 이외에 **LSD 등 차단방역 의무 교육 추가**('25) 및 소독·방제 매뉴얼\* 등 배포('26)
    - \* ①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농가 방제 매뉴얼, ②가금농가(산란계·종계 등) 닭진드기 표준 방제 매뉴얼 등

- **(컨설팅)** 민간 컨설팅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우수 컨설턴트 인증 추진('26)
  - \* 보유 인력, 컨설턴트 실적(질병 발생감소율 농가 만족도) 등 평가
  - 우수 컨설턴트에 대한 **교육·홍보** 등 인센티브 지원 및 컨설턴트 매칭 플랫폼 등 인프라 구축
  - 지자체는 **우수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농가 교육·관리, 농가 질병 발생 현황 파악** 등 추진
    - \* 우수 컨설턴트를 활용한 농가 교육·점검, 시료채취 등 추진



- **(질병진단)** AI, 구제역 등 농장 정기검사에 민간병성감정기관 활용 확대\* 및 민간기관에 대한 진단능력 평가, 검사·진단 교육 강화
  - \* AI: ('24) 8천건 → ('26) 16 / 구제역: ('24) 100천두 → ('26) 200
- **(사후 처리)** 가축 살처분, 사체처리 등을 영위하는 가축폐기물 처리업종을 신설('25,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)하여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산업화 유도

## [과제 2] 사전예방 시스템 효율화

- ❖ KAHIS 내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도 평가 확대 등 스마트 방역 실현
- ❖ 축산관계시설 영업자 및 차량운전자의 방역수칙 신설, 살처분 업체 등록 등 사람·차량 관리 강화 및 고위험지역 중심 소독·방제 추진
- ❖ 농장 점검 전문인력 확충 및 CCTV 활용 점검 효율화 등 점검 체계 개편

### 1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(KAHIS) 기반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

- (위험지역·농가 선별) 사전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KAHIS 내 축적된 정보를 활용한 위험도 평가 확대\* 및 고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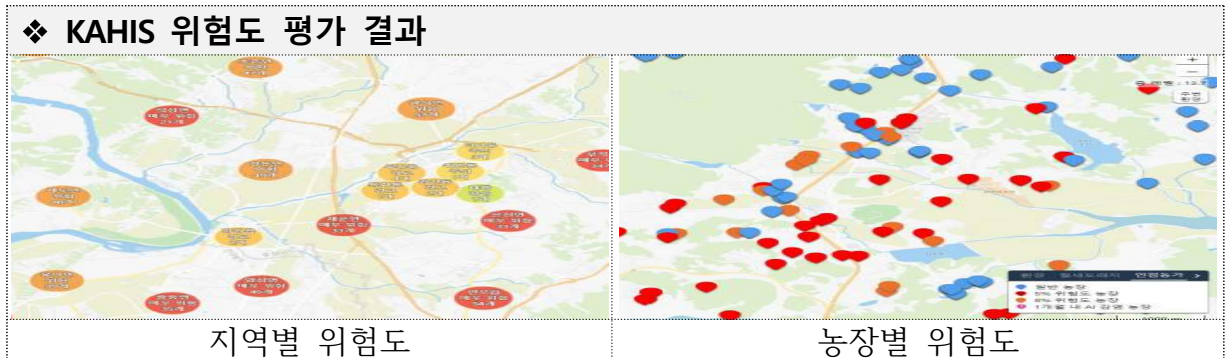
\* ('24) AI 위험도 평가 시범적용 → ('25) ASF → ('26) AI·ASF 시스템 고도화

- KAHIS 관리 정보 및 평가 지표\*(환경변수, 방역변수, 전파변수)를 지속 확대하여 발생 예측 정확도 제고\*\*('24: 44% → '29: 85)

\* (현행) 주변지형, 출입차량 등 57개 → (추가) 철새 발생이력 및 마릿수, 농장밀집도 등 13개

\*\* (현행) 위험도 상위 10% 내에 발생농장 44% 포함('24년말기준) → (개선) 발생농장 85% 포함

- 농장 구조 및 주변 환경도 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농장 모식도 정보, 계열화사업자의 농장 점검실적 및 폐사율·산란율 등의 정보 구축



- (활용) 위험농가 선별, 차량이동 등 KAHIS 정보를 활용한 방역관리 효율화

- '24/'25년 AI 위험도 평가 결과 활용 실적을 분석하여, 위험도 평가를 통해 선별된 고위험 농장·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 효율화\*('25.下~)

\* 소독자원 집중투입, 방역점검 및 전화예찰 확대, 농장 예찰·검사 주기 단축 등 추진

- 추후, 위험도 평가 결과를 지자체에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지자체 방역관리 및 농장점검 계획 수립 등에 활용

- 거점소독시설 미방문 또는 소독 후 위험지역 경우 축산차량\* 등이 농장 방문 시 차량운전자·농장주 등에게 안내문자 발송 시스템 구축('25~)
-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, 거점소독시설 운영정보, 축산차량 통행량 등을 자율적 방역에 활용하도록 농가 등 민간에 공개('26~)

- (KAHIS 2.0) 민간연구기관 연계를 통한 방역정보(전염병 발생현황, 대응조치·효과 등) DB 및 정보 접근 대상(방역관→민간) 확대(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강화)  
\* 질병 분석·예측 고도화, 대국민서비스 강화, 데이터베이스 확대, 사용자 편의성 개선, 빅데이터 관리 등을 위해 차세대 시스템 전환 로드맵 마련('26)

## 2 사람·차량 등 주요 전파요인 관리 강화

- (축산관계시설) 출입자 간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축산관계 시설(도축장, 사료제조업체, 집유장, 가축시장 등) 관리 강화
  -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게도 방역기준 준수 의무(사람·차량 소독, 야생동물 유입 차단 등) 부여('25~)
  - 사료 제조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독·방역시설에 매개곤충 방제 시설 추가 등 시설기준 강화('26~)
- (축산차량) 가축전염병의 주요 전파 요인인 축산차량 관리 강화
  - 축산차량 운전자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\* 의무를 신설('25~)하고, 축산차량 소유자·운전자에 대한 방역 보수교육 주기 단축(4년 → 2년)  
\* 농장 및 축산관계시설 출입 시 차량 내부 소독 및 대인 소독 등
  - 거점소독시설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고, 소독 유효성 점검 및 종사자 대상 방역 교육 실시 등 관리체계 마련('25)

□ **(상시출입자)** 농장주 이외의 농장 출입자의 방역 의무 부여

- 살처분 과정에서의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가축폐기물 처리업 (가축 살처분, 사체처리) **영업자** 등의 **구비 요건\*** 및 **준수사항\*\*** 마련('25~)
  - \* 상시 고용인력 수(수의사 등), 차량, 장비, 방역물품 등
  - \*\* 농장 출입 시 소독, AI·브루셀라 등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장비 착용, 살처분 과정에서의 병원체(바이러스) 전파방지, 살처분 후 농장방문 금지 등
- 농장 근로자(종업원)에게도 **방역기준준수 의무 부여**
- 농장 출입자의 **농장 출입 전 소독** 등의 방역 의무를 강화하고, 미 이행한 자에 대한 **패널티**(손해배상 포함) 부과 검토
- **가축 상하차 및 예방접종 인력** 등 농장 상시출입자에 대한 **등록·관리제도** 마련('27~)

□ **(매개체)** 철새·야생멧돼지 등의 서식 조사, 가축전염병 예찰 등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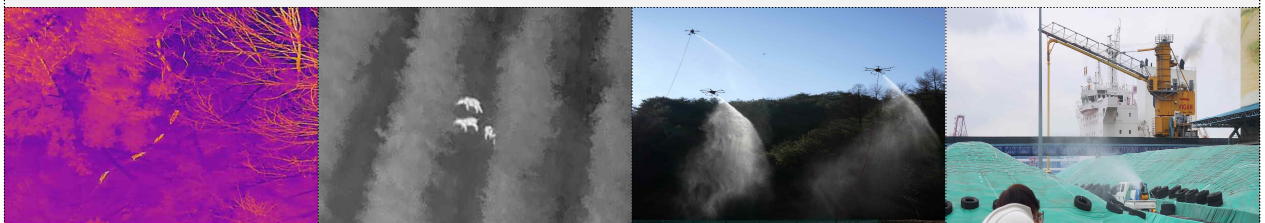
- **드론 영상 촬영과 인공지능 기술**을 연계하여 철새 개체수 및 종류 탐지, 야생멧돼지 밀도 파악 등 **예찰 효율화**('25~)
  - \* (현행) 쌍안경 등을 통해 직접 개체수 확인 → (개선) 드론 촬영으로 대체
  - 영상 저장·공유 등이 가능한 **드론 관리시스템 구축**(~'26) 등
- AI(철새), ASF(야생멧돼지) 이외에도 **야생동물에 대한 구제역**(야생고라니, 노루 등), **돼지열병**(야생멧돼지) 등 **모니터링 체계 구축**(환경부 협업)

□ **(소독·방제)** 소독이 어려운 장소(밀집단지 지붕, 좁은 진입로 등)는 드론을

활용하여 소독하고 **고위험 지역에 대한 매개곤충 방제 강화\***

\* (기존) 13개 항만 → (확대) 역학조사, 위험도 평가 등을 통해 고위험 지역 선정

❖ **드론을 활용한 예찰·소독 및 위험지역 매개곤충 방제**



<드론 활용 야생멧돼지 예찰>

<드론 활용 소독>

<매개곤충 방제>

### 3 방역 점검의 실효성 제고

□ **(점검 인력)** 검역본부, 방역본부 등에 점검 전문인력을 확충하고, 지자체 가축방역관 이외 인력 활용 확대

○ 검역본부 특사경(현재 117명) 전담 인력 확충\*, 방역본부 내 특별 점검반 배치(26) 등 고위험지역(밀집단지 등) 연중 점검체계 구축

\* 특사경 전담 부서 설치, 직무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강화, 업무 매뉴얼 제공 등

○ 지자체 가축방역관 이외 일반 공무원도 축산농가의 방역기준 준수 여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('25~, 가전법 개정)

□ **(점검 시스템)** 점검 거부 농가 관리 강화(과태료 부과 등) 및 농장 내 CCTV 기록 열람 등을 통해 점검 효율화

○ 축산농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·방해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점검 거부 시 농가 과태료 부과('25~)

○ 동절기 등 위험시기 농장출입 최소화 등을 위해 가축방역관의 농장 CCTV\* 활용 비대면 점검 활성화('25~)

\* 가금 농장의 출입구, 사육시설 내부 등에 CCTV를 설치하고 30일간 영상기록 보관 의무 / 설치 시 국비 30%, 지방비 30% 지원 중

○ 현장에서 정보 입력·확인이 가능하도록 모바일시스템 개발('25, KAHIS 연계)



□ **(지자체 점검 지원)**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방역점검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 지원, 지도·홍보 등 추진

○ 과태료 처분 등에 대한 지자체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점검 전 점검 대상·기간 및 위반 시 처분 등 지도·홍보 강화(계속)

\* 방침 공문 송부, 보도자료 배포, 생산자 단체 간담회, 점검 대상 알림톡 송부 등

## [과제 3] 신종 가축전염병·소모성 질병 등 대응강화

- ❖ 가성우역, 아프리카마역 등 신종 가축전염병 대비·대응체계 구축
- ❖ AI, SFTS 등 인수공통전염병 대응을 위한 원헬스 협력체계 강화
- ❖ 소모성 질병 등의 방역 역량 제고를 위해 컨설팅, 백신지원 등 추진

### 1 신종 가축전염병 사전대비

- (예찰) 야생고라니 등 가성우역 모니터링('25~, 환경부 협업) 실시 및 럼피스킨과 연계한 아프리카마역·블루텡병 매개곤충 예찰('25~)

#### ❖ 럼피스킨 매개곤충 예찰 체계

- ▶ 예찰 담당기관(민간 연구소 등)을 지정하여 권역 농장(30~50호) 내 매개곤충 정기 수집·분류 및 검사 추진('25년 4개도 120여 농가)
- ▶ 국내 유입 매개곤충 예찰을 위해 관계부처(질병청, 농진청)와 협업하여 고공포집기 활용 예찰을 강화하고, 연차적 추가 설치

\* ('24) 15개소(타 부처 연계) → ('25~'29) 매년 농식품부 자체 3개소 신규 설치

- (발생 대응체계) 가성우역 및 아프리카마역 백신을 사전 비축\*하고, 긴급행동지침(SOP) 마련('25)

\* (가성우역) 16만두분(전체 염소의 30%), (아프리카마역) 28천두(전국 말 1회 접종분)

- 가축전염병 특성 및 해외발생 현황, 의심증상, 차단방역 수칙 등 교육·홍보

- (국제협력) 신종 가축전염병 정보 확보·역량 제고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아시아·태평양 지역 및 세계동물보건기구(WOAH)와의 협력 강화

- 동북아 3국(韓·中·日) 수석수의관(CVO) 회의, 세미나 등을 정례화하여 가축질병 관련 정보공유 및 기술협력 강화(WOAH 특별기여금(약 3억원) 활용)

- 국제 방역전문가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실무 공무원(6~7급) 파견\* 추진

\* (일본사례) WOAH와 양해각서를 체결('22년)하여 젊은 공무원을 WOAH 본부 및 지역사무소에 파견

## 2 인수공통전염병 대응을 위한 원헬스 협력체계 강화

- **(동물단계 관리) 예찰 등 동물단계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강화**
  - 큐열(15,700건 신규), SFTS(980건→1,300), 포유류 AI\* 등의 예찰을 확대하고, 중장기 인수공통전염병 예찰 프로그램 마련\*\*('25)
    - \* (축종) 돼지개('18~) → 고양이젓소 등 추가('24년~) / (원유검사) '24년 1,496건 → '25년 3,802
    - \*\* 역학상황, 발생위험성, 전파력, 진단수준 등을 반영한 국가예찰 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
  - SFTS\* 등 주요 인수공통전염병 동물용 백신 개발\*\*(~'26)
    - \* (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) 치사율 약 20%, 국내 연평균 약 200건 인체감염 발생
    - \*\* 검역본부(mRNA 백신)와 민간업체(약독화 백신)에서 각각 백신 개발 중('26년 상용화 목표)
- **(인체감염 예방) 주요 인수공통전염병(SFTS, 큐열, 브루셀라, AI) 특성에 맞게 축산농가, 농업인 등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·홍보 등 강화**
  - 특별방역기간 대비 가금농장 및 관련 종사자 대상 AI 방역 교육(8~10월) 시 인체감염 예방조치 교육 병행 등
    - \* AI 발생 농가, 상시출입자(방역사 등)에게 감염병 안내문 배포 등 추진
  - 주요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수칙 교육·홍보 프로그램 개선 및 농업인 교육 연계 추진(농진청, 질병청 협업)
    - \* 감염 예방수칙 영상제작, 농진청 교육 활용을 위한 표준 교안 제작 등
  - 가축방역사 등에 대한 인수공통전염병 정기 검진 지원 추진
    - \*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연 3명 이상 브루셀라병 감염(중대산업재해) 시 기관장 처벌 가능
- **(협력체계) 중앙사고수습본부(중수본) 중심 관계부처 간 정보공유 및 인수공통전염병 확산 등에 대비한 원헬스(One-Health) 협력체계 강화\***
  - \* 인수공통전염병 대책위원회 활성화(질병관리청장-검역본부장 공동위원장, 환경부식약처·해수부 등 참여) 및 동물단계 인수공통질병 대응 TF 운영('24~, 농식품부·질병청·농진청 등)
  - 포유류 AI 긴급행동지침(SOP) 보완\*('25) 및 포유류 AI 발생에 대비한 관계부처 합동 모의훈련 실시('25~)
    - \* 소·염소 등 가축 감염 시 살처분 범위, 발생농장 원유 처리 방법, 방역대 설정 등

### 3 소모성 질병 방역 관리 강화

- (방역관리체계 개선) 3종 가축전염병 방역 조치를 완화하여 농가의 자율적인 발생신고를 유도하고, 발생상황 모니터링 강화
  - 발생농장 이동제한 등은 미실시하고, 발생 증가 지역에 대한 농가에 방역요령 등 교육·홍보, 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소독 등 추진

#### ❖ 해외 모니터링 질병 현황

- ▶ (미국: 모니터링 질병 42종) 월간 발생보고 대상이며, 정부는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국가 차원의 방역조치 없이 발생 변화만 모니터링
  - \* (소 등) 블루텅병, BVD, (돼지) PRRS, TGE, (가금) 전염성F낭병, 닭전염성기관지염, 마레병 등
- ▶ (일본: 보고대상 전염병 71종) 발생 시 지자체 등을 통한 신고 및 집계를 통하여 발생상황 변화를 추적하며, 질병별 방역지침을 정하여 발생농장 지도
  - \* (소 등) 블루텅병, 렘피스킨병, (돼지) PRRS, TGE, (가금) 마레병, 전염성F낭병 등

- 돼지 소모성 질병인 PED·PRRS의 정기 예찰·조사를 실시('25~500호)하고 지역적 발생 분포, 건수 등 농가 안내(알림톡 등, 주 1회)

- (컨설팅 내실화) 사업\* 전담 기관(방역본부)을 지정하고 컨설턴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컨설팅 효과 분석\*\* 및 우수사례집 배포(매년)
  - \*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(16억원),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(9억원),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(3억원) 등
  - \*\* 컨설팅 전후 전염병 발생 현황, 생산성 상승효과 등

- 만족도 조사, 컨설팅 효과 평가 등을 통해 우수 컨설턴트는 농장 추가배정 등 인센티브 제공, 미흡 컨설턴트는 사업 참여 제한('25~)
  - \* 허위 컨설턴트 부당 수령금 환수 및 고발조치, 사업 참여 배제 등 부실 컨설팅 관리 병행

- (백신 등 지원강화) 농가의 소모성 질병 대응을 위해 백신지원 및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한도 상향\* 등 추진
  - \* ('24) 돼지 50백만원, 가금 100백만원 → ('25) 시설 보수 지원 20백만원 추가
- 현재 유행 중인 전염병 유전형에 맞는 맞춤형 백신\*을 지원\*\*하고, 올바른 백신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교육·홍보 강화(생산자단체 협업)
  - \* (예시) G1 유전형 PED 유행 → G2b로 변화 / \*\* PED 백신예산 '24년 14억원 → '25년 17억원

## [과제 4] 방역인프라 확충

- ❖ 치명률 등을 고려한 **가축전염병 분류 기준 명확화** 및 1~3종별 **방역조치 체계화**
- ❖ 방역인력 부족에 대응한 **수의 인력운용 효율화** 및 **민간 인력활용 확대**
- ❖ 과제발굴, 연구방향 설정 등을 위한 **가축방역 연구협의체를 구성·가동**하고, **대규모 전략투자 분야 발굴 및 현장 중심 연구개발(R&D) 강화**

\* 방역분야 R&D 예산(안): ('24) 413억원 → ('25) 562 → ('26) 626 → ('27) 697

### 1 가축전염병 분류체계 및 방역조치 개편

#### □ (분류체계) 법정 가축전염병의 분류 근거 마련 및 재분류('25)

- 치명률,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**1종, 2종, 3종**의 정의를 신설하고, **유연한 대처**를 위해 **고시로 신규 가축전염병 지정도** 가능토록 개선

##### ❖ 가축전염병 분류체계 개편(안)

- ▶ (1종) 치명률이 높거나 전파속도가 빠르고 대규모 발생의 우려가 커서 **지역단위** 일률적인 **방역 조치**가 필요한 가축전염병
- ▶ (2종) 치명률과 전파속도를 고려하여 발생 시 **농장 단위 방역 조치**가 필요한 가축전염병
- ▶ (3종) 발생 상황에 대한 **모니터링**이 필요한 가축전염병

- 새로운 분류 기준에 따라 **법정 가축전염병**을 재분류하고,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**가축전염병(인수공통전염병 포함)**은 신규 추가('25)

#### □ (방역조치) 1~3종별 살처분, 이동제한 등 방역 조치 체계화

\* 1~3종별 방역 조치 방향 설정, 법령 개정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('25) 및 가전법 개정('26)

등급	현행	개편
제1종 (현 15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일부 전염병만 일시이동중지명령, 예방적살처분 등 방역조치 가능</li> <li>* (일시이동중지) 구제역, 고병원성 AI 등 4종 (발생농장 살처분) 구제역, HPAI, ASF 등 7종 (예방적살처분) 구제역, HPAI, ASF 등 6종 (도태명령) 구제역, HPAI, ASF 등 6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모두 지역단위 방역조치 가능</li> <li>- (지역) 일시이동중지 명령, 발생 인근 농장 예방적 살처분, 도태명령</li> <li>- (농장) 발생농장 살처분, 이동제한</li> </ul>
제2종 (현 32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일부 전염병만 발생농장 살처분 가능</li> <li>* (살처분) 브루셀라병, 결핵병 등 8종 (발생농장 이동제한) 2종 전염병 전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모두 발생농장 살처분 이동제한 가능</li> <li>- 다만, 일시이동중지 명령, 예방적 살처분 등 지역단위 방역조치 미실시</li> </ul>
제3종 (현 21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발생농장 이동제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모니터링만 실시</li> <li>(국가 차원의 방역조치 없음)</li> </ul>

## 2 현장 가축방역 인력의 효율적 운용

- **(가축방역관)** 가축방역관 업무 현황 및 실태 분석(~'24)을 통해 인력 운용 효율화 방안 마련('25)
  -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업무범위·자격요건 조정 등을 검토하고, 여건변화 등을 반영\*하여 지자체 가축방역관 적정인원 기준 재설정('26)
    - \* 가축방역사 확대, 개식용 종식, 가축전염병 분류체계 및 방역조치 개편 등
- **(민간 인력활용)** 공수의, 가축방역사 등 민간 가축방역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방역관 업무 부담 완화 유도
  - 광역지자체도 공수의를 활용 가능하도록 위촉 권한 확대(시·군·구 → 시·도 추가, 수의사법 개정, '25)
  - 동물보건사 등 민간 인력의 가축방역사 위촉을 확대\*하여 가축방역 업무에 활용(현재 방역본부 직원을 방역사로 위촉 → 기타 민간 인력 위촉 확대)
    - \* (방역본부) 가축방역사 교육 등 관리 (농식품부지자체) 가축방역사를 위촉하여 활용 및 수당지급
  - 가축방역사의 백신접종\* 등 활용 확대 방안 검토
    - \* (현행) 수의대 학생 실습, 봉사활동, 축산농가 자가 진료 등 예외적 허용(수의사법 시행령) → (확대안) 백신접종 명령 시, 방역관의 지도를 받는 경우 가축방역사 등도 접종 허용
  - 방역본부 기관장 상임화 등 ①인력·조직 확충, ②드론, 방역교육 등 사업 개편, ③현장 인력 처우개선 등 기관개선 과제 추진(계속)
- **(처우개선 등)** 공방수 등 수당 상향 및 주요 지방 방역조직인 동물 위생시험소를 확대·개편 등 추진
  -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상향, 배치기관의 관사·주거지원비 제공 의무화 등 처우개선 추진(공방수법 시행령 및 예규 개정, '25)

- 동물위생시험소의 위상 및 역량 제고 등을 위해 동물위생시험소 업무·조직 등 **개편방안 마련**(동물위생시험소법 개정 등)

### 3 현장맞춤형 연구개발 강화

- **(백신)** 구제역, 럽피스킨 등 수입 백신에 대한 **국산화** 및 **국내 유행 소모성 질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백신 개발 추진**
  - 구제역 백신 국내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분리 럽피스킨 바이러스 기반 백신 후보주 선발(~27) 및 생백신 개발('28~30)
    - 구제역 백신 이상육 피해(약 500억원/연) 감소 및 접종 효율화 등(근육 2ml → 피내 0.5ml) 위한 **피내 접종용 백신 개발**('27~)
  - DIVA(접종 동물과 감염 동물 구분) 가능한 AI 백신 개발(~'26)
  - **돼지열병 청정화**를 위해 **모든용 마커백신(E2)을 개발**(~'26)하고,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ASF 백신후보주 안전성·유효성 평가(~28) 및 생백신 개발(29~)
  - PED 백신 개량(계속), PRRS 다가백신 개발(~27) 등 **소모성 질병 저감**을 위한 국내 유행 변이주 맞춤형 백신 개발

#### ❖ 소모성 질병 백신·치료제 등 개발 계획(안)

- ▶ **(PED)** 높은 방어항체를 유도하는 PED 백신 상용화(~'27), 차세대 VLP(Virus Like Particle) 플랫폼을 이용한 PED 바이러스 유사 입자 백신 산업화 연구('26~'28)
- ▶ **(PRRS)** 다양한 변이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PRRSV 다가백신 개발(~'27), PRRSV 발생 농가별 맞춤형 생백신 적용 연구('28~)
- ▶ **(BVD)** 소바이러스설사병(BVD) 예방용 백신 국산화 및 산업화(~'27), BVDV 재조합 단백질을 이용한 subunit 백신 개발('26~'28)
- ▶ **(소 코로나 바이러스)** 국내 환경에 적합한 소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개발 및 산업화(~'27)
- ▶ **(돼지 자돈설사병)** 자돈설사병 예방 가능 의약품 개발 및 산업화(~'27)

□ **(기획 연구)** 전략투자 분야 발굴을 통한 동물용의약품 등 대규모 연구개발 추진

- 동물용의약품 시장 성장 등에 대응하여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지원체계 구축 및 수출 확대 등을 위한 연구 추진

\* 차세대 백신 개발, 진단 기술 고도화, 반려동물 첨단 의약품 개발 등

-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제어 역량 강화 및 효율적 대응을 위한 '국가 기후위기 감염병 예측기술 개발사업' 추진('27~'31)

- 빅데이터 활용 및 첨단기술 융합(IT-AI)으로 고위험 가축전염병\* 예측 및 최적의 방역 조치를 제안하는 미래형 능동 방역 연구 추진

\* (미유티 재난형 질병) 가성우역, 아프리카마역, 블루텅 등, (변종 가축감염병) 변이 PED, 고병원성 PRRS, (Disease X) 미래에 팬데믹(대유행)을 일으킬 수 있는 신종 감염병

□ **(차단방역)** 농가 수요가 높은 방역시설, 소독 등의 차단방역 연구개발 추진

- 생산자단체, 계열사 등과 함께 양돈농장 방역시설의 실효성 검증 등 실험모델 운영('24~) 및 오리의 방역시설 효과 연구 실증사업 추진('26~)

- 질병별 소독제의 효과 검증 및 소독 가이드라인 제시('25~'27), 닭진드기 친환경 방제제와 종합방제 표준모델 개발(~'26) 등 소독·방제 효율성 제고

- 거점소독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 무인화 연구 추진

□ **(방역지원)**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, 소모성 질병 방역, 유전 자원 확보 등의 방역관리 효율화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

- 가축 활동 인식(사료섭취, 체온 등)을 통한 질병 조기 발견 시스템 개발(~'28), 눈으로 보는 가축전염병 바이러스 신속현장검출기술 개발('25~'28, 19억원) 등

- 소모성 질병 현황 조사 및 방역 대책 연구('26~, 생산자단체 등 컨소시엄 구성), 일시이동중지 효과 및 직·간접적 피해(살처분 비용 등) 분석 추진('26~)

- 해외 기술·유전 자원 확보, 백신효능 평가 등을 위해 해외 공동연구 확대

\* 베트남 ASF 변이 바이러스 병원성 및 전파특성 연구('25~'26), 구제역 유전자원 확보(베트남, 라오스, 캄보디아, 몽골, 방글라데시 → 스리랑카, 태국 추가) 등